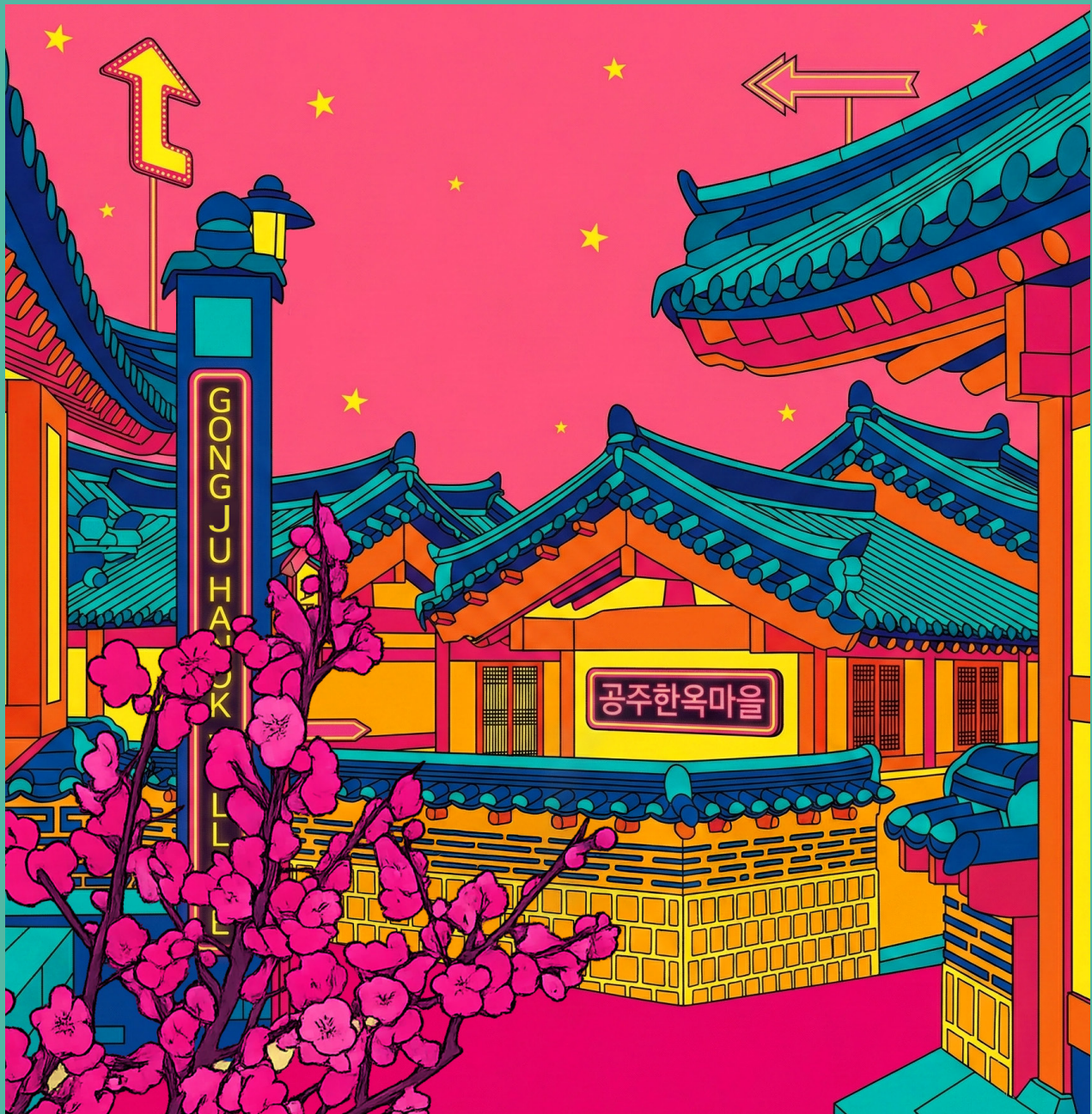


# 흥미진진 공주

2026.03

Vol. 372



## “ 씨름의 메카 공주 ” 공주시의회, 공주시 씨름단 재창단 ‘청사진’ 그렸다



공주시의회 의정토론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지난 9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표 의원과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씨름의 아이콘’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 손한동 충남씨름협회장, 이일주 공주문화원장 등 대한민국 씨름계와 지역 문화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 씨름단 재창단 및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관초-봉황중-생명과학고로 이어지는 전국 최강의 인프라를 갖추고도, 성인팀 부재로 우리 아이들을 타 지자체에 뺏기는 ‘공주 패러독스’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운동부 창단을 넘어, 씨름을 공주 관광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앵커 시설이자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자리”라고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준희 회장은 “공주는 씨름의 본고장에서 재창단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진단하며, “거창한 전용 경기장 건립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팀 그 자체다. 기존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비용을 줄이고, 협회 차원에서 전국 대회 유치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면 공주는 단숨에 ‘씨름의 성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언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손한동 회장은 지역 체육계의 뼈아픈 현실을 토로하며 재창단의 명분에 힘을 실었다. 손 회장은 “지난 2008년 팀 해체 이후 18년 동안, 우리는 공주의 아이들이 타지 유니폼을 입고 장사에 등극하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봐야만 했다”며 “씨름단 재창단은 끊어진 ‘지역 인재 육성의 선순환 고리’를 복원하는 역사적 책무”라고 호소해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일주 원장은 씨름을 ‘문화 산업’으로 확장하는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공주의 역사성과 씨름의 전통성을 결합해 백제 문화제 기간에 ‘상설 씨름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미국 LA 박형만 이사장 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와 연계한다면, 공주 씨름단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현장을 넘나드는 승부사 김기태 감독은 철저한 ‘경제 논리’로 집행부의 예산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감독은 “씨름단 운영비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하며, “영암군이 씨름단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완판시켰듯, ‘공주 알밤’ 브랜드를 씨름단과 연계해 마케팅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운영비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안내

일 정 : 3. 16.(월) ~ 3. 30.(월) / 15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용성



##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정말 필요한 분들께 가고 있습니까?



#공공근로개선

#선별복지강화

#노인일자리개편

#기회형평성

#공정한기준

공공근로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몸은 힘들지만 손놓을 수 없는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하십니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됩니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한사람이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실은 소득 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 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별 복지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의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할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말, 틀리지 않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즉, 공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또는 일정수준의 고정소득이 있는 분을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분을 같은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주시의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은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요령 있는가”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다.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이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노인 일자리는 후순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단순 서류 심사가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생활 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 서류상 소득이 아니라 실제 생활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읍면동이다. 형식적인 점수표가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 정말 절실한 분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구조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회가 특정인에게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이라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영원히 진입하지 못한다. 연속 참여 횟수, 또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할 때이다.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이다. 아울러 선의로 운영될 때 가장 먼저 왜곡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복지는 베풀수록 박수받는 정책이 아니라 때에 맞고 기준이 명확할수록 신뢰받는 정책이다.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이며, 그들의 시간이어야 한다.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원래의 자리,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을 간직하며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삶의 동력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주시의회 의원  
권경은



## 인구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공주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검토 촉구

#지방재정활용

#민생회복

#인구유출방지

#경기회복

#경제활력

공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 명’ 선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 9,9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공주시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다.

이 위기 앞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공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공주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겪는 문제라는 말이 공주시의 위기를 덜어주지는 않는다. 10만명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공주시를 지탱해 오던 상징적 숫자이다. 이것은 공주시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 침체와 맞물려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은 무너진다. 일자리와 활력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공주시를 떠난다. 지역 쇠퇴의 악순환이고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 대기업 기반이 약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공주시는 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식당 매출도 줄었고, 배달도 줄어들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했다고 한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현금성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인근 청양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기 광명

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응이 없는 공주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금의 무대응은 곧 하나의 선택이 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주시의 미래로 돌아올 것이다.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두가지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한번 숨을 고르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숨을 고를 시간을 주고,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골목 상점과 전통시장에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지역화폐 지원금은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공주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 25년 말 기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가용 재원은 약 264억 정도라고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재정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써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활용해야 할 시기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미 현실이 된 인구 위기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하나의 악순환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지금의 결단이 공주의 하락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임규연



“ 종이에서 디지털로, 민원 신청의 기준을 바꿉니다 ”

#디지털전환

#인공지능시대

#스마트도시공주

#스마트행정

#공주미래전략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섰다. 사회 곳곳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다. 빠르고 간단한 절차, 한번에 끝나는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방향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전망이다.

공주시 역시 이러한 국가적 발전 방향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 기술부터 스마트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과연 편해졌는지 의문이 든다. 시민이 행정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곳은 바로 민원실이다. 즉, 민원실에서의 경험이 행정의 인상을 결정하고, 민원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민원실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이 서식, 반복 기재, 창구 대기는 여전히. 시민은 기본 인적사항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해서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 역시 그 내용을 재입력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답답함을 느끼고, 공무원은 반복되는 업무로 부담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되고 민원 만족도는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도 시사점을 준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공주시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유가 무엇일까? 시민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운영 개선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즉, 도시의 시설은 발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주시 공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구축의 완성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의 시범 사업을 제안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먼저, 민원실 및 공주시 누리집에 주요 민원신청서의 서식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시민들은 민원실 방문 이전에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전자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이후 민원창구에서는 작성된 서식을 QR코드 스캔을 통해 전송받아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은 장소에 구애 없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미리 작성된 전자 서식을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함에 따라 전산 재입력 및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하여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기존의 작성 방식도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해당 시범 사업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주시 행정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순히 디지털 전환의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분명한 ‘만족’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